



사학법 재개정 집단 식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이광선(왼쪽 세번째) 총회장 등 개신교 목회자들이 20일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식발식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法·檢, 이번엔 '대법원 예규' 갈등

檢 “사법독립 침해 폐지 마땅”
法 “대법 보고는 통상 절차”

중요 인사가 연루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면 이를 대법원에 보고토록 규정한 대법원 재판예규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이 대법원의 영향력 행사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는 검찰이 “사법권 독립 및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재판예규를 조속히 폐지하라”는 주장을 20일 내놓자 대법원은 “국가 기강이 무너졌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선 판사들도 검찰의 주장을 ‘언론플레이’, ‘사법부 흡집내기’ 등으로 의미를 꺾아내리며 애써 외면하고 있으나 검찰은 “판사가 재판상황을 대법원에 보고하는 것은 나라가 망할 일이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영장 기각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일선 판사들은 대체로 중요사건의 접수 사실 및 재판 결과를 대법원에 보고토록 규정한 재판예규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검찰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중요사건이 접수되면 내용을 간단히 대법원에 통보하기는 하지만 ‘이런 사건이 접수됐다’고 알려주는 성격일 뿐이다. 재판예규에 따른 통보를 부담스럽게 느꼈다든지, 대법원이 재판에 간섭하려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면 일선 법원 영장계 직원들이 범죄사실 요지를 복사해 대법원에 전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중요사건의 진행 과정과 내용을 대법원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재판예규 규정을 통해 대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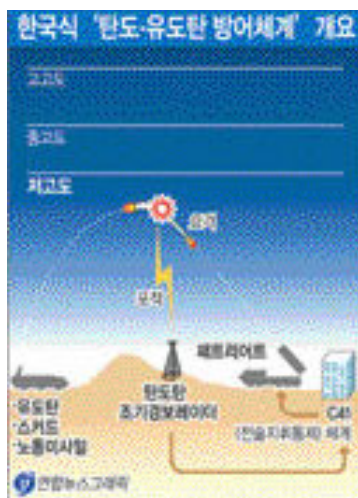
이 일선 판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대검의 한 중검검사는 “상황보고를 하도록 법률상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검사들과 달리 일선 판사들이 재판 진행상황을 일일이 대법원에 보고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나라가 망할 일”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재판예규란=검찰이 문제를 삼은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라는 명칭의 재판예규는 1980년대 초 마련된 일종의 법규이다. 재판 예규는 ‘각급 법원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발부는 물론 중요 형사·민사·행정 사건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지체없이 대법원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軍, 北 미사일 위협 대응...저고도 탄도·유도탄 요격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군이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실험 이후 최근 발간된 ‘합참의장 지휘지침서’에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외비로 발간된 합참의장 지휘지침서는 군령권을 행사하는 최고 지휘관인 합참의장의 의지와 비전을 담은 책자로 각 군이 전력 계획서를 작성하고 소요를 제기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어체계 구축 계획을 확인한 뒤 “이는 저고도 공중방어체계이며 구체적인 시기나 배치 장소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어체계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하는 미사일방어(MD)체제에 비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지형을 감안해 저고도-



중고도-저고도의 3단계 가운데 저고도 방어체계”라고 말했다. 즉 저공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유도탄과 스커드, 노동미사일 등을 포착, 요격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탄도·유도탄 방어체계 독자구축 작업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과 일본은 'MD체제 개발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저고도 대공방어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참여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주택대출금리인상, 지방이 무슨죄?



장필수
경제부 차장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지난달 '11·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거론한 후 정부와 금융기관의 주택대출 억제와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은행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5%~6.6% 전후에서 형성돼있다. 1년전에 비해 평균 0.7~0.8%포인트 가량 올랐다. 즉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금리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이자만 연 70~80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중요한 점은 금리상승의 대부분이 1개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은행 돈을 쓸 필요가 없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다 실수요자인 서민들만 잡는 꼴이 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이 되는 CD(양도성에증서)금리에 은행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금리를 더해(가산금리) 결정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은 CD금리가 오르는데도 원인이 있지만 은행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가산금리를 올리고 0.2~0.3%포인트씩 적용해주던 우대금리를 없앴기 때문이다.

'11·15' 부동산대책 이전만하더라도 근저당설정비를 면제해주고 심지어 부동산중개업소와 연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라던 금융기관들의 돌변을 보니 “본노가 치민다”는 대출자들의 하소연을 짐작할 만 하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급등한 금리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다.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민들의 가계대출 총액은 2004년 10월 7조8천406억원에서 2년만에 16.5%인 1조2천969억원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대에서 60%대로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빚을 내 집을 산 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지역민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을 바라보는 감정이 수도권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데 있다. 지역민들은 을 한해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폭등을 보면서 ‘지방에 사는 것이 죄’라는 푸념을 쏟아내고 살았다. 자고나니 1억씩 올랐다는 수도권 친척들의 말을 듣고 박탈감에 시달려왔는데 주택담보대출 억제와 금리인상이라는 족쇄는 수도권과 똑같이 채우고 있으니 불만이 터질수 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실시하던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전국에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해 반발을 사고있다.

폭발적인 지방 대출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지금부터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지역별·금액별로 더욱 세분화해 신속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 bungy@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ga-wi restaurant. It features the restaurant's logo, a list of menu items including '연말연시무임', '둘란치', '상견례', '고희연', and '각종세미나/이벤트 연회장 차임'.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TEL. 062)234-5815, 234-1115' and '12인용 포장만방'.

Advertisement for Namdoeom Kimbabeon. The background shows a fishing boat on the sea. The text reads: '남도어선은 영광 범성포의 5개 글비 名家들이 만든 대한민국 대표 명품 글비 브랜드입니다. 남도어선 김어브랜드. ●유명수산물 ●합성염색글비(주식회사) ●관동(글비) ●전통(글비) ●왕(글비)'. It includes a phone number: '061)356-8060'.